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Roll of the Government for design Development

금진우

고신대학교

Contents

논문요약

Abstract

I. 서론

II. 디자인 정책의 현실적 문제들

1. 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

2. 디자인 정책의 위상

1) 정치적 힘의 미약성

2) 디자인 산업의 영세성

3) 정책적 무관심

3. 디자인 정책의 집행 문제

1) 정책으로서 우선 순위

2) 시장과 기업

3) 중재와 조정4 디자인 관련 정부 조직 현황

III. 정부의 역할

1. 기본 방향

2. 디자인 정책 주도 기관의 대안

IV. 결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우리 정부가, 디자인에 대한 일반적 관심과 더불어 정책의 대상으로서 디자인을 인식하게 된 것은 1960년대 수출 상품의 디자인 문제가 제기되

면서부터 이다. 한국의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은, 외형상 경쟁국이나 개발 도상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발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디자인 분야가 지니고 있는 특성과, 동시대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정책의 대상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간 부분에서 스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디자인 관련 시장의 미성숙과, 디자인 산업 자체의 다양한 구성 요인으로 인해 구조적인 문제가 상존한다. 따라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조정이 있어야 한다. 그간 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한 디자인 진흥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비해 결과는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가 있다. 이는 디자인 발전을 위한 정부의 많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말해 준다.

이런 관점에서, 디자인 정책이 정부의 독자적인 정책 대상으로서 소홀히 취급된 배경을 점검하고, 정부의 효율적인 디자인 정책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정부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위상 제고의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디자인 담당 조직 체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대통령 직속의 '디자인 자문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을 선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였으며, 민간 부문이 아닌 정부가 정책으로 디자인을 인식해야 하는 타당성 있는 이유를 설명하였다.

Abstract

It was since raising the design issue of exported products in 1960's that our government started to understand design as a

subject of policy as well as the public interests on it. The design and design industry in Korea seem to have developed enough to be envied by competing countries or underdeveloped countries. However, the understanding of design as the subject of policy still has many problems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design field and contemporary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situations. It is important for the civil sector to lead the market itself and to foster the competitive power by itself before anything else for design and design industry to grow. In Korea, there is still structural problem due to the immaturity of design related market and various components of design industry itself. Therefore, there should be aggressive policy support and adjustment of the government.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design promotion measures carried out by the government enthusiastically did not achieve results of sufficient level compared to the contents and scale. It indicates that there have been many problems in spite of numerous supports of the government for the development of design. From this point of view, I examined the background that the design policy has been treated carelessly as an independent policy subject of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factors to be the obstacles in implementation the design policy efficiently. Also, I proposed to create 'design consultative commission' under direct control of the President as an alternative for the organization system in charge of design in the central government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position of policy fulfillment of the government. Based on this, I

proposed the role of government as a plan to make design and design industry advanced and explained the reasonable reason that the government should understand design not as a civil sector but as a policy.

1. 서론

정부가 디자인에 대한 관심과 디자인 정책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은, 1960년대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출 상품의 디자인 문제가 제기되면서부터이다. 이 때 디자인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는 1965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수출 진흥 확대 회의'에서 디자인 진흥 기관의 설립과 디자인 전람회 개최를 결정하였다.¹⁾

그 결과로 '한국 공예 디자인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대한민국 산업 디자인 전람회'²⁾가 개최되었

으며, 이 연구소는 그 후 이름과 역할이 바뀌면서 오늘에 이르러 '한국디자인 진흥원'이 되었다.³⁾

한국의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은, 외형상으로는 잘 성장되어 세계화의 현실 속에서 후발 국가들의 부러움을 살 만큼 충분히 발전된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디자인이라는 분야 자체가 가지는 특성과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으로 인하여, 디자인이 정책의 대상으로 경험해야 하는 후진적 대우는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다.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이 발전하려면, 민간 영역에

1) 서세일, 우리 상품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1998), p131

2) 당시에는 '대한민국 상공 미술 전람회'였음

3) 금진우, 디자인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0), p 35-36

서 스스로 시장을 선도하고 자생적인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디자인 관련 시장의 수준이 아직은 완전히 성숙되지 않았고, 디자인 산업 자체가 다양한 구성 요인으로 이루어 지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정책 지원과 조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의 원인은, 효율적인 디자인 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주체가 되는 중앙 정부 내 디자인 관련 부서의 역할과 위상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책 수행의 효율성과 위상 제고의 측면에서, 중앙 정부의 디자인 담당 조직 체계는 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조직으로서 적정 위상을 유지 및 확보해야 하며, 행정 주체 간의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새로운 디자인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정비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정부의 디자인 정책 담당 조직의 역할과 조직 위상의 변화에 따른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지침이 되는 여러 문제점과 대안들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사점을 통해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디자인 정책의 현실적 문제들

1. 디자인 정책에 대한 인식

정책의 대상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연구는, 디자인 학계 뿐 아니라 행정학, 정치학, 정책학 등에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독자적인 정책의 대상으로, 혹은 정책과 관련하여 디자인이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어진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디자인 관련 정책은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

정책의 한 부분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산업 정책 혹은 산업 진흥 정책의 한 분야로 다루어져 왔다.⁴⁾

둘째, 최근까지 정부나 기업의 의사 결정자들 다수가 디자인이 갖는 정책적 의미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다.

셋째, 디자인 학계에서도 정책의 대상으로서 디자인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려는 관심이나 의지가 부족했다.

넷째, 정책은 디자인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개념의 호해가 있다.

이런 이유를 살펴보면, 현대 산업과 시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디자인에 관해서 정책적으로 신중하게 기획하고,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디자인 정책의 성공 요인과 실패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할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하려는 노력이 정부나 민간에서 찾아보기 힘들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디자인 정책에 관한 연구가 학계는 물론 정책 연구 기관의 연구 관심사가 되지 못한 이유는, 디자인 정책 연구로부터 나오는 결과가 정책 입안자, 행정 관료, 정치가 및 각종 언론 매체의 관심을 끌만한 정치적 쟁점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디자인 담당 행정 조직이 독립되지 못하고, 조직의 위상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2. 디자인 정책의 위상

정부 행정의 우선 순위나 정부 조직의 위상은 국가의 정치, 사회, 경제적인 환경과 이것을 이해하는 국민의 정서에 따라 좌우된다. 정부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와 그에 따른 적절한 조직의 위상

4) , 전계서, p14'디자인 정책의 개념과 정책 문제'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OPEN, 2004.4), p 32

은 정치와 사회적인 국민의 동의로 결정된다. 따라서 하나의 사안이나 분야가 다른 사안이나 분야보다 열등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슈가 되지 못한다면 그 사안을 다루는 정부 조직의 위상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디자인은 교육, 경제, 환경, 에너지 등등의 문제처럼 관심과 이목을 집중시키는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교통, 조세처럼 국민이 정부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쟁점이 나타나지 않는 분야이다. 정책의 위상에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치적 힘의 미약성 디자인은 국방이나 농업, 혹은 주택 관련 정책들처럼 국민을 대상으로 하여 정책 입안을 하고 집행함으로써 정치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근원을 제공하는 잠재력이 매우 약하다. 따라서 정부의 정책적 관심과 우선 순위는 정치적 힘을 행사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우선하기 때문에, 디자인을 다루는 독립적인 부처를 만들거나 관련 조직의 위상을 높이는데 한계가 있다.

2) 디자인 산업의 영세성 대기업 위주로 성장해 온 국내 산업 구조상 기업 디자인 부서가 활성화되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디자인 전문회사의 발전은 지연되었다. 이들 전문 디자인 회사들도 규모와 자본이 영세하며, 업무에 있어서도 전문화가 미흡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곳은 소수에 불과하다. 정부의 정책 대상으로 보는 디자인 분야는 이들 디자인 전문회사를 중심으로 기업 디자인 부서와 개인 스튜디오를 포함한다.

디자인 산업을 구성하는 업체의 규모는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소규모이다. 그럼에도 디자인 산업을 구성하는 업체의 종류는 매우 다양하다. 이로 인해 디자인 업계의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힘들며, 정부를 상대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과 효율이 떨어진다.

결국 정부가 상대하는 업계의 규모가 작은 경우, 이를 다루는 정부 조직의 위상은 낮아질 수 밖에 없다.

3) 정책적 무관심 대부분의 정책 결정자들이나 국민들은 디자인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기 보다는 다른 산업의 한 부분을 도와 주는 보조적인 역할로 보거나, 일상 생활 속에 여가나 소비 행위의 도구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디자인이 정책 대상으로 다루어질 때에도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본질이 변화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인한 선심성 발언으로 실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까지도 있다. 특히 디자인과 관련된 부처 간의 협의와 조정에 어려움이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인식으로는 디자인 정책을 다루는 정부 조직의 독립이나 위상 제고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기 힘들다.

3. 디자인 정책의 집행 문제

1) 정책으로서 우선 순위 디자인 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성장을 돕기 위하여 정부가 정책으로 디자인을 지원한다고 해도,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다른 정책 분야보다도 낮게 설정되어 있다면, 디자인 정책을 추진할 때 정부 부처 간의 협조가 어려워지고 디자인 정책을 통한 디자인과 디자인 산업의 지원에는 어려움이 있게 된다. 문민 정부 이후, 정부에서 의욕적으로 디자인 진흥책을 발표하였지만 국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약하여 투자와 효율적인 집행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그 예가 된다.

2) 시장과 기업시장이 정부의 개입을 수용하여 정부가 원하는 수준의 시장 기능을 할 수 있는지, 또 자율권을 부여 받을 때 스스로 효율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시장의 수준에서 결정된다. 이 때, 시장의 수준은 시장을 구성하는 기업과 소비자인 일반 시민의 의식 수준, 생활 수준,

정보의 질과 양에 영향을 받는다. 특히 기업의 발전 능력은 시장의 수준을 결정짓는 핵심적 역할을 한다. 기업이 스스로의 이익 창출에만 급급하고, 영리 추구에 대한 목표를 단기적으로 달성하려고 하거나, 현실에 나타나는 디자인 업계의 문제들을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보다 문제 자체에 대해 무관심과 냉소적 태도로 일관할 때,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나 지원은 효과를 거둘 수 없다.

3) 중재와 조정디자인 산업이 가진 특징 중 하나는 디자인 산업에 포함되는 업체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는 것이다. 디자인 업계는 많은 이질적 구성 요인들이 모여 있음으로 갈등과 마찰이 생겨나고 통일된 의견을 결집하기가 어렵다. 우리나라의 경우 협회나 학회 등 디자인 관련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있으나, 협회의 회원간 협력이 원활하지 못하며, 회원이 협회의 기능에 거는 기대 수준도 낮은 편이다. 더구나 이들 단체의 대부분 회원은 기업이 아닌 학계 소속이기에 기업 현장의 갈등과 문제에 대한 인식 도출은 낮다고 보아야 한다. 디자인 관련 단체는 학계 및 업계 내의 마찰 요인을 제거하고, 현장의 과열 경쟁을 방지하며 디자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을 중재 내지 조정하면서 정부를 상대로 디자인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는 설득과 로비력을 갖추어야 한다.

4. 디자인 관련 정부 조직 현황

1) 디자인 주무 부서의 변천정부 내에서 디자인을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산업자원부 산업기술국 산하의 브랜드디자인과이다. 디자인 담당 부서는 1970년 상공부 무역진흥과가 설치된 이래 무려 14차례나 주무 부서 변동⁵⁾을

5) 내 디자인 정책 추진체이자 한국디자인진흥원(KIDP)의 관리와 감독 기관은, 처음 '디자인포장'으로 1970년 10월 상공부 통상 진흥국에 설치되었다. (디자인 진흥 업무는 수출 포장과 디자인이라는 개

겪어오는 가운데, 1996년에 와서 독자적인 산업 디자인과로 발족했으나 불과 2년만에 축소 개편되고 말았다. 이러한 영향으로 디자인은 독자적인 진흥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였고, 부서 역할도 정부 산하 진흥 기관의 관리 감독의 역할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러나 점차 디자인 분야의 수요 증대로 인하여 부처간의 업무 조율이나 협력 사업이 많아짐에 따라 디자인 분야 직무 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 다시 주무 부서인 산업 디자인과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여론을 불러왔다.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디자인 통합 진흥법(가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으며, 전경련은 그 대안으로 디자인 진흥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위해 '디자인청 신설안'을 내 놓고 정부 부처 사이의 디자인 통합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⁶⁾

하지만 이 안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부처 사이의 디자인 정책 통합과 다양한 디자인 산업 분야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감해야 하는 전제가 필요하다. 정부 디자인 주무 부서는 그후, 품질디자인과를 거쳐 현재 산업기술국 브랜드 디자인과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 산하 진흥 기관으로는 1970년 상공부가 주관이 되어 '한국수출디자인센터', '한국수출품포장센터', '한국포장기술협회' 등 3개 기관의 통합 작업이 추진되었고, 1970년 5월 29일 디자인 및 포장에 관한 연구 개발, 디자인 포장 기술의 교육 연수, 디자인 및 포장기술의 실태조

념으로 1970년 5월 상공부 무역 진흥과에서 이미 시작되었다.) 그 후 1977년 3월 디자인포장과는 폐지되었고, 진흥원의 관리 감독 기능만을 담당 기관을 이관시키며 수행해 오다가 1996년 2월에 와서야 통상산업부에 '산업디자인'과가 설치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부의 부처 축소 여파로 오래 가지 못한 채, 1998년 4월 산업자원부 '품질디자인과'로 축소 개편되었다가 '브랜드 디자인과'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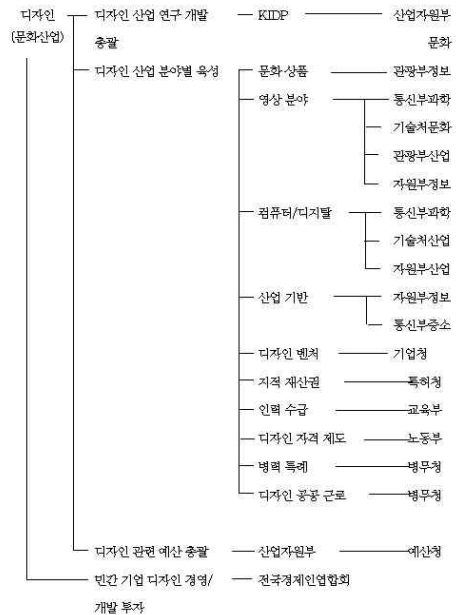
6) '대기업 디자인 실태조사'(전국경제인 연합회, 1998), p14

사, 지도, 전시, 그리고 생산 공장 운영을 사업 목적으로 이 3개 기관을 흡수 병합하여 재단법인 '한국디자인포장센터'를 설립하였다. 이 한국디자인포장센터가 우리 나라 디자인 정책 체계로 볼 수 있는 최초의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디자인포장센터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나 상공부 관리 감독 부서의 잦은 변경, 디자인과 포장 기술이라는 이질적인 두 분야를 균형있게 육성하는데 따르는 문제, 전문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다가 1991년 7월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으로 개편되었다. 산업디자인포장개발원은 연구 개발, 진흥, 교육, 연수, 정보 제공 사업 등 디자인 포장 분야의 진흥사업을 전개하였는데, 지원 방식은 진단 지원, 지도 지원, 개발 지원 등으로써, 1997년 1월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으로 개편이 될 때까지 꾸준히 지원 사업을 벌여왔다. 이렇게 볼 때, 199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의 디자인 정책 체계는 뚜렷한 조직 구조상의 위치를 갖지 못하고 수없이 개편 변화되면서 소극적으로 기업 활동의 지원 기능에 머물러 있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만들어 지면서 비교적 안정되고 지속적인 디자인 지원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KIDP)은 디자인의 개발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체였으나, 시대적 변화와 디자인의 다양한 영역과 업무를 아우르는 문제를 발전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2001년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개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디자인 관련 유관 부처디자인의 다변적 속성으로 인해 디자인과 관련한 정부의 행정 업무는, 주무 부처 외에도 여러 부처에서 문화 산업을 포함한 디자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 예로 중앙 정부에서는 문화관광부 문화산업국,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지식정보산업과, 조달청 문화상품팀과 디자인경영팀, 그리고 지방 자치

단체로서 서울특별시 산업경제국과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들 수 있다. 여러 행정 부서에 분산되어 있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표1>과 같다.

<표 1> 정부 내 디자인 업무 관장 체계



더구나 이들 유관 부처들은 디자인이라는 공통된 직무 내용을 공유 하면서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유지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III. 정부의 역할

1. 기본 방향 정부의 역할을 통하여 민간 부문의 활동 효율성이 높아져야 한다는 것은, 디자인을 포함한 일반적인 산업 부문에 정부가 간여하는 대전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전제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표2>에 나타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효율적인 정부 역할의 유형을 근거로 디자인 행정의 이념과 국내외의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때,

중앙 정부의 역할은 다음의 기본 방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규제형의 정책보다는 진흥 및 지원 형의 정책 수립과 집행.

둘째, 선도형의 정책 집행보다 조정형의 정책 집행

셋째, 직접 주도 보다는 간접 유도형의 정책 집행 디자인의 발전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지원의 주체가 되는 디자인 행정 조직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의 위상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대통령 직속의 디자인 자문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디자인 담당 비서관 직을 신설하는 등 위상 변화가 필요하다.

< 표 2> 정부 역할의 유형)

〈 표 2〉 정부 역할의 유형 7)

정부 역할 유형	주요 역할	효과
촉진적 역할 하는 정부	서비스를 직접 공급하기 보다는 서비스 공급의 방향을 설정	민간에게 창의성 부여, 민간 주도 경제 활동에 최대한 자율 보장
국민이 소유하는 정부	서비스를 국민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제공하고 있는지 점검 확인	국민 책임 의식 강화
경쟁을 유도해 내는 정부	경쟁과 독점간의 문제 해결 정부의 효율성 제고 규정보다는 목적과 임무	비용 감소, 변화에 신속 반응, 고객 만족 추구, 공무원 공저, 사기 높임
목표 지향적 정부 (규제의 자양)	완료에 치중 성과에 따른 예산 배정으로	혁신적, 융통성, 사기 진작에 이점
성과 지향적 정부	업무 실적 향상 관료가 아닌 고객의 욕구	성과 측정을 통해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 및 성공에 대한 보상
고객 지향적 정부	충족을 위한 서비스 제공	고객에 대한 특성 파악 및 고객 지향적 서비스의 시행
기업가적 정부	적극적 수익 창출 노력	
미래에 대비하는 정부	미래에 대한 예측, 정책에 반영	이윤 동기의 도입을 통해 부가 측면에서 실제 지출 결과 측정
분권화된 정부	문제의 사전 예방 참여와 팀워크에 따른	사전 예방을 통한 노력 예산 절감
분권화된 정부	의사결정의 분산화 시장의 형성	중앙집권적 의사결정의 역기능 감소, 개인별 창의성 극대화
시장 지향적 정부	시장에 대한 개입	시장 기능 활성화

2. 디자인 정책 주도 기관의 대안 정부의 디자인 담당 조직은 별도의 부처로 독립하여 있는 경우,

7) Osborne, David and Ted Gaebler, Reinventing Government, (William Patrick Book, 1992)

대통령 자문 위원회로 존재하는 경우, 부처 내의 국이상으로 존재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중앙 정부의 디자인 행정 조직이 디자인 정책을 담당하는 최고 조직으로서 적정 위상을 유지하고, 행정 주체 사이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수 있으며, 새로운 디자인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변화될 수 있는 대안이다. 이를 요약하면 <표3>과 같다.

〈 표 3〉 디자인 행정 기구 대안

대안	기회 요소	제한 요소
디자인청으로 독립 -한국디자인진흥원의 기능 대폭 조정	-제도의 지원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디자인 행정의 종합적 추진과 협조 체계 획득 -디자인 정책 집행 기능 강화 -디자인 행정 환경 대응력 제고	새로운 부처 창출의 난관
대통령 직속 '디자인 자문 위원회' -타 부처와 협력 통한 제도적 지원 강화 -집행 기능은 KIDF에 대폭 위임	-부처간 의견 조정, 협력 지원 획득이 용이 -디자인 인식 제고 효과 및 디자인 위상 강화 -디자인 행정의 총괄 기획성 확보 -지방 디자인 행정 활성화에 도움	디자인 행정 집행력이 떨어질 가능성 존재 -새로운 위원회 창출의 난관
산자부 내 위상 조정 -디자인담당 차관보 혹은 디자인정책실 신설	-산자부 내 디자인 행정 위상 강화 -디자인 산업의 경제적 중요성 강조 -산업 거점 정책 강화	-디자인 행정의 총괄 기획성이 떨어질 가능성 -디자인 행정의 위상과 리더십 미약

V. 결론

디자인이야말로 국제 경쟁력의 핵심이자 21세기 지식 기반 산업의 중추 라는 주장은 자주 접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디자인 분야는 이런 주장에 비해 그 실체를 정책 대상으로 인정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한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정책 수행에 필요한 정부의 지원과 부처간에 분산된 업무를 조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디자인은 매우 광범위한 부문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디자인의 수준을 높이고 디자인 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리 창출이 궁극적 목표인 민간 기업에게 맡겨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적정 수준의 위상을 갖춘 단일화된 정부 조직에 의한

조정과 중재, 그리고 방향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정책적 자원과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에 정부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중앙 정부의 디자인 조직이 독립된 부처 이상으로 승격되는 것은 디자인 분야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만의 주장으로는 불가능하며,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적 상황 및 국민의 정서와 일치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도록 논리적 근거와 명분을 갖추어야 한다. 디자인 조직을 정부 내의 독립된 부처 혹은 위원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디자인 분야가 갖는 순위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 및 국민의 디자인 인식 제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할 것이다. 정부의 조직상 새로운 부처의 신설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대통령 자문 기구인 '디자인 자문 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이는 디자인의 속성상 관료 체제나 행정적 양식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와 창의성 제고의 관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책 결정자들이 디자인을 보는 시각이나 디자인 정책의 우선 순위가 낮아서 디자인 조직이 독립된 상위 조직으로 설치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산업자원부 내에서 '디자인 정책실'과 같이 국 이상의 조직으로 위상을 제고하거나, 디자인을 담당하는 차관보급의 직급을 신설하는 것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 디자인 진흥책으로 시행된 정부의 디자인 정책은 그 내용과 규모에 비해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했다는 평가처럼, 그간의 공적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문제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디자인 정책도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으로 삼아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단순한 디자인 진흥 지원 사업의 진행 업무에서 벗어나 국민의 삶의 증진과 국가 산업 발전 전략으로서 디자인의 개념 정리와 함께 디자인을 위한 정책 논리와 철학이 강조되는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율성과 창의성이 전제되는 속성상 디자인이 정책의 대상이 되는가에 대해 비판을 하는 입장이 여전히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한 답이자 정부가 디자인 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⁸⁾

첫째, 개인이나 기업은 디자인 개발로 인해 생긴 이득에 대해 개발자의 보상을 보장하면서 사회에 배분할 능력이 없다.

둘째, 디자인은 창조적 행위이므로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디자인 활동에 임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위험에 대한 기피를 중화시키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할 수 있다.

셋째, 상대적 규모가 영세한 전문 디자인 회사로서는 디자인 산업 및 개발에 있어 투자 자금 확보가 어렵다. 장기 투자나 결과의 불확실성 등은 정부의 개입을 필요로 한다.

넷째, 디자인을 민간과 기업에만 맡길 경우 디자인의 공공성과 영리성으로 인해 디자인 서비스의 중복을 가져오며, 이는 소비자의 비용 증대 요소가 된다.

다섯째, 시장에서의 경쟁은 의사 결정이 개별적이고 고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는 국가적 이익 차원의 산업 및 R&D를 유도하지 못하게 한다. 정부의 개입으로 디자인에 대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다.

여섯째, 디자인 정보를 확산시킴으로 변화에 익숙하게 하고, 그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리는 일은 정부의 역할이다.

8) , 전게서, p 34

참고문헌

- 1) 박동서, 한국 행정의 연구, 법문사, 1994
- 2) 박정택, 공익의 정치 행정론, 대영출판사, 1990
- 3) 이경태, 산업 정책의 이론과 현실, 산업연구원, 1991
- 4) 정정길, 정책학 원론, 대명출판사, 1997
- 5) 조동성, 이동현, 디자인 디자인 산업 디자인 정책, 디자인 하우스, 1996
- 6) 금진우, 디자인 정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0
- 7) 산업정책연구원, 디자인 산업 정책 연구, 1995
- 8) 이재덕, 이세일, 우리 상품의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방안연구, 산업 연구원, 1998
- 9) OPEN, 서울대학교 한국디자인산업연구센터, 200410) 대기업 실태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199811) Anne Larason Schneider and Helen Ingram Policy Design for Democracy,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712) Osborne, David and Ted Gaebler, Reinventing Government, William Patrick Book, 1992